

제41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25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대 증원,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
2. 간사 선임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 |
| 2. 간사 선임의 건 | 8 |
| ○ 간사(조정훈) 인사 | 9 |
| 1. 의대 증원,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 | 9 |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논의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시행일인 모레 27일부터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바뀝니다. 그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위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역시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개원 이후 여야 의견 차이로 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제 오후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오늘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책임을 지는 위원장 입장에서든 늦지 않게 여야 위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모든 교육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새롭게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계획이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전체회의 때 이미 소회와 다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21대 대비 월등하게 입법 성과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때는 제가 교육위원회 간사였는데요. 법안소위를 나뉘 열심히 했지만 21대 폐기된 교육위 법안이 약 7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전해 드리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 왼쪽에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님부터 또 조국혁신당 강경숙 위원님까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정복 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쭉 계신데요.

우선 여당 위원님이신 김대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간사 선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날인데 박수 한번……

○**김대식 위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우리가 그동안에 22대가 개원이 돼서 오늘 이렇게 첫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게…… 선서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좀 그렇지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교수·총장, 35년을 교육계에 몸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를 희망을 했고 또 오늘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교육위원회, 교육만큼은 저는 이념을 초월해서 여야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킬 것인가 또 미래의 동력으로 어떻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끝까지 토론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따라서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좋은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영호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뵈는데 또 여기서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문정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서로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헤쳐 나가면서 함께 서로 고민하는 그런 교육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의 앞날이 매우 교육스럽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젊으신 위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어제 여당이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민생이라든지 여당으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승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 복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에서 어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오늘 열릴 상임위를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교육위에서만큼은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합의를 통해서 앞

으로 잘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 여야가 함께 교육위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특히 우리 교육위이기 때문에 수많은 학도병들께서 피와 목숨으로 이 나라를 지켜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우리 교육위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지성적이고 품격 있는 교육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함께 그렇게 협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위에 들어오게 되어서 굉장히 소회가 깊습니다.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의석을 108석을 얻었기 때문에 소수당인 경우 입장, 또 국민들께서 정부와 여당을 채찍질하셨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나 범야권이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 모습들이 협치가 전혀 되지 않고 저희들 국민의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20석만 되어도 교섭단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의견도 소중히 들으라는 말인데 108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과연 이게 국회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육위원회는 특히 정파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의 운영 방향조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에서 만큼은 합의된 정신, 그런 정신으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서로 동료애를 발휘하면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운영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는데요. 이 말씀은 정부 측과 대통령께서도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 여당 간사로 내정되신 조정훈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조정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22대 전반기에 교육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발언을 하실 때 오늘이 제2차 전체회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1차 회의 때 서로 인사를 하셨으리라 짐작하는데 2차 회의가 돼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시작하셨지만 실은 저희가 들어오니까 좋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너무 좋지요. 오랜만에 박수 소리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상임위에서 박수 치는 거.

○**조정훈 위원** 이러한 정신이 저는 우리 교육위가 지켜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언젠가는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고 또 바뀌 가면서 하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다수결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치의 본질이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업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마 우리가 논의할 교육만큼 정치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순식간 변할 수 있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함몰시키지 말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본회의장이 시끄러워도 이 교육위에서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위원님들과 같은 부분도 있고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면서 격의 없이 논의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체계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 거는 기대가 큼니다. 저도 21대 간사를 해 봤는데요. 그 당시 이태규 간사님과 저의 관계는 상당히 역지사지하는, 서로의 입장을 한번 거꾸로 놓고 잘 우리가 한번 고민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조정훈 위원님께서도 이 역지사지의 정신을 잘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인사말씀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여러 위원님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협치와 또 함께 상호 존중하면서 교육계를 잘 이끌어 보자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현장에도 있었고 또 행정 쪽에, 또 제가 교수로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의 분야들을 꼼꼼하게 잘 다루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 교육계가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력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저쪽 뒤로 갈까요, 다시 앞으로 해서 갈까요?

○**문정복 위원** 뒤에서부터 오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현장에 교육위원으로서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의 교육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입시 경쟁 부분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의 행복도가 최하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교육이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여야가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1일 의원회관에서 교육부가 27일 발표 예정인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 위원들에게만, 비공개하려다가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동안 유보통합 추진하면서 누누이 지적해 온 재원 대책이나 당초 작년 12월 말에 공개하기로 한 통합 모델 시안 등을 제때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 위원들에게도 유보통합 보고하라는 요청은 모두 거절하고 의원실 요구자료조차 답변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교육부가 개점휴업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제대로 업무보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상임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셔서 걱정이 컸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함께 힘 합쳐서 우리나라 미래 희망인 교육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고 또 오늘 국민의힘의 교육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정치하고 교육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지요. 정치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교육도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정당이나 정치는 인적 충원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거고 교육도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서의 역사적 발자취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재 양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부분,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회의적 시각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 장관님도 그렇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생각할 때 진정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서

퇴보하는 길을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인재 양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함께 손잡고 뛰기를 기원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정 지역의 김준혁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덕분에, 아버지가 백령도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백령도에서도 전기 없는 데서 75년, 76년에 만 2년을 살았었지요. 아버지 전근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꿈이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는 거였는데,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수가 됐네요. 평교수인 제가 총장님 출신 김대식 위원님하고 함께하는 것도 이 국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나름의 평등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정조시대 정치사 전공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조 전공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덕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두 번이나 강의도 했었습니다.

정조시대 정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혁이었지요. 개혁을 위해서 경장대고라고 하는 큰 선언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민산, 백성들의 재산을 두텁게 만든다. 두 번째가 인재, 교육입니다. 교육을 강화하는 것. 세 번째가 국방 개혁, 융정. 네 번째가 채용,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건데. 정조는 국가를 개혁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사라졌던 향교 교육, 공교육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공교육을 부활시키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규장각을 만들고 초계문신제도, 엘리트 교육을 하게 되지요. 저는 공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엘리트 교육에서 노론, 소론, 남인 가리지 않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정조시대의 정치와 교육에서 핵심은 당파를 초월한, 이념을 초월한, 그래서 민생을 만들어 내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정치다.

오늘 이 자리가 좀 어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고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되기도 하고 서로 협치를 통해서 안정되게 하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무거운 어떤 적대적 관계 같은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조시대 정치를 뛰어넘는 그런 협치의 공간으로 우리 교육위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가……

한국 교육은 특히나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 말씀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 차관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야당 위원님이 장관님 말씀 너무 잘 들으면 안 돼요.

농담이었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인사말씀 있겠습니까.

○김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6·25 74주년, 호국영령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국하면 애국자와 유족들이 존경받고 충분히 대접받는 나라, 매국하고 반역하면 징벌 받는 그런 나라가, 교훈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교육행정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0.7% 차이로 대통령이 된 국민의힘은 나라의 많은 재정과 국가 권력, 검찰 등을 다 활용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5.4% 차이로 이긴 총선, 우리 민주당 국회는 야당에게 100석 넘게 할애를 국민들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 어느 자리에 가서 얘기할 자리도 없고 또 국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언론에서도 써 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5.4%나 이겼는데도 이렇게 야당 위원들에게 많은 자리를 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언권을 주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특히 우리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간에 자신의 입장 또 국민들의 입장을 각자 여야가 처절하게 대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국회는 여야가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을 해서 국민들과 학생들 이익에 반영하는 그런 멋진 정치를 좀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야에서 같이 통용되는 이름 김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민정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까.

○고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광진을 고민정입니다.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교육부장관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큼니다. 여야 간에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노선과 방향들은 있겠지만 우리 교육위 안에서만큼은 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경제부총리도 있고 사회부총리도 있는데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사회부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장관님께 드렸었거든요. 정말 진심입니다.

예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사회통합을 위해서 혹은 사회 분야에서 조정하고 만들어야 될 정책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만큼의 권한은 잘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께서 교육부장관으로 계시는 만큼 저희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프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면 그 권한을 또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주호 장관님이 부총리로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단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라도 그 권한을 좀 높여 놓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저희 야당도 또 제가 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시지요. 문정복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문정복입니다.

다행인 것은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21대에 교육위 간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위 현안과 관련해서 무척 잘 알고 계시고 위원회 운영을 참 잘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위원회를 여당 간사님과 잘 조율해서 정말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소통하고 논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굴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또 우수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 하실 때, 여야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께 또 야당 위원님들은 여당 위원님들께 정성 어린 박수를 보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야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견을 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셨으니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7분)

○위원장 김영호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영호 합의가 되었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정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정복 위원님 때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정말 없는 것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야당 간사 됐을 때는 여당 위원님으로부터 박수를 못 받았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 주시지요.

여야 간사님들의 협치 정신에서 우리 상임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간사(조정훈) 인사

○위원장 김영호 간사로 선임된 조정훈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로 교육위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직을 해 나갈지 참 생각이 많이 됩니다.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집권당이고 국회에서는 소수당인 상황이고 또 위원장이 야당이시고 또 교육부 부총리는 저희 당의 부총리시고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협의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는 팽팽한 5대 5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하는 마당에서 선의를 가정하고 우리 모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전제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그리고 우리 진영의 정치적인 발언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과 함께 좋은 상임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시 한번 조정훈 간사님 축하드리고요.

문정복 위원님, 조정훈 간사님과 함께 우리 상임위를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대 증원,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

(10시3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의대 증원,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대 정원 확대, 유보통합에 관하여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출석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최근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의결로써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오늘 출석을 약간 눈치보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야당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따르지 않고 보좌진들이 요청하는 업무 설명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여당이 구성한 특위에는 교육부차관이 유보통합 등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했으면 요구받은 사람이 출석을 하는 것은 의무이고 상식입니다. 장관 이하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또는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보고나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안질의는 먼저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에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출범으로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실현과 교실혁명을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등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교육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 덕분에 교권보호 5법 개정, 학교 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육 현안의 입법과제들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유보통합, 의대 정원 확대 등의 현안을 포함해 교육개혁 정책들에도 입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석환 차관입니다.

나주범 차관보입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입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구연희 대변인입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입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입니다.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입니다.

박대림 기획지원관입니다.

(인사)

향후는……

○**조정훈 위원** 교육부에서 아마 비공개로 요청을……

○**위원장 김영화** 비공개 요청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평소에는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아마 내일 유보통합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공개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취재나 촬영 중인 언론인 관계자분께서는 죄송하지만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참고로 제가 3선 의원으로 상임위에서 박수치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냉각기를 뚫고 여야 위원님들 인사, 소개 때 박수를 허가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상임위 활동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다 퇴실하셨나요? 회의 진행해도 되겠지요?

장관님, 이제 보고해도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유보통합 추진계획과 의대 정원 확대 현안입니다.

먼저 유보통합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료가 아직 배포가 안 돼서요.

회의 종료 후에 이 자료는 다시 교육부에서 회수해 가신다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전달받으셨지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1쪽,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세계적으로도 영아를 포함한 생애 초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서비스 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중앙 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6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쪽, 추진 방안입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 통합기관제도 마련, 행·재정 관리체계 개편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합니다.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방학 중 운영, 거점형 휴일 돌봄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합니다.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를 목표로 하고, 3~5세반은 1 대 12에서 1 대 8을 목표로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합니다.

2025년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자격·양성체계 개편 이전에도 교사들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수시간을 상향하고 연수를 내실화합니다.

또한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여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영유아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기관제도를 마련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통합기관은 0~5세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서 통합기관의 명칭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운영 기준을 상향 평준화합니다.

3쪽입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편합니다.

우선 통합교사 자격은 현재 0~5세를 담당하는 영유아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를 담당하는 영아정교사, 3~5세를 담당하는 유아정교사를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교사 양성체계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학사 이상의 학과·전공제로 개편하고 현직 교사에 대해서도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통합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지방 행·재정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차이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단위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추진합니다. 광역·기초 단위 일괄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관 과정에서 기존 시도·시군구청의 어린이집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고 대응투자 및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 중 필수적 경비 등은 이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4년 말까지 보육업무 및 재정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27일에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4년 말에 통합모델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 현안입니다.

의과대학 집단행동 대응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교육 선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과대학 집단행동 대응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직후 올해 2월부터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신청이 있었습니

다. 현재까지 누적 휴학신청 규모는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 수의 약 70% 수준입니다. 4월 이후 대부분 대학에서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며 대학들은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의 휴학 승인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학계를 미제출한 극소수 학생만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급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월부터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대학에 동맹휴학 승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학이 개별상담을 통해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유급 발생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 수업 운영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설치 대학의 총장님들이 정상적인 의대 학사운영을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2일에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유급 발생 예방 등을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지원 등을 포함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총장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대학에 명확히 안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동맹휴학 승인이 발생할 경우 대학에 대한 학사운영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학생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감 없이 원활하게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하여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의대생에 대한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요 행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고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의총협 등을 통해 대학 현장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의대협 등 학생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대학의 휴학 및 학사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학사운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의 탄력적 학사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대학과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교육 선진화입니다.

늘어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중 대학별 인원 가배정을 통해 의대 교원이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여 첨단 실험실습 환경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의 공간 재구조화와 함께 건물 신축 등 대규모 공사도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여 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지역의료인력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교육 혁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올해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 관련 보고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종료 후 자료를 회수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주호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당과 성명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순서로 질의를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드린 것 주질의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시면 서면질의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정부 측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번째 질의는 고민정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장관님, 오늘 발표해 주셨던 의대 증원 문제나 유보통합도 그렇고 공통점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들을 다 그냥 교육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안 다 저희가 보고받은 정도 수준에서만 봤을 때는 준비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된 것 몇 가지 여쭙볼 텐데 의대 증원을 하려면 대학별로 증원 규모도 정해야 될 거고 관련된 시설이나 실습공간, 기자재가 준비가 돼 있는지도 평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국교육학평가원에서 원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지금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의평원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민정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의평원에서 평가는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주기에 따라서……

○고민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의대 증원 문제는 급작스럽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특별하게라도 이것은 당장, 이미 시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고민정 위원 평가원에서 평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평가 주기에 대해서 차관께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한테 말씀을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의대배정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부 안에서 실제로 얼마큼을 배정할지를 누군가는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의대배정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했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대배정위원회는 이미 기능을 완수했고요, 지난번에 올해 그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명의 규모가 복지부에서 정해져서……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2000명의 증원이라는 게 현재 의대의 수용 가능한 숫자냐? 그렇지 않다는 문제 제기과 걱정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회의를 거쳐서, 2000명은 이 학교 학교마다 다 배정해도 땀흘려야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숫자가 어떤 학교들은 3배가량 늘었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49명이었는데 151명을 더 증원시켰어요. 그러려면 교사 수는 물론이려니와 기차재, 실습공간도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돼 있는지를, 의대배정위원회가 됐든 한국의평원이 됐든 회의 결과물을 저희가 알아야 이게 합당하구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회의록도 없다고 그러고 의대배정위원회는 이미 논의가 끝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관련된 회의록과, 회의록이 만약에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한 근거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보통 이맘때쯤 되면 정부예산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가을이 되면 국회로 넘어오는데, 의대 증원 문제는 학교별로 이미 2025년 신입생들은 다 준비가 끝나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의 시설을 더 증원시켜 주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지금 정부예산안에 이것 다 배정돼 있습니까? 반영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부예산은 워낙 예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요. 교육부는 거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고민정 위원 하고 있고가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됐어야지요. 그래야 25년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2025학년도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정 위원 예산 배정 끝났습니까,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항상 예산 절차에 따라서……

○고민정 위원 아니, 의대 증원 2000명에 관련된 예산이 이미 다 정부안으로 넘어갔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직도 요구 중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을에 국회에서 끼워 넣기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당장에 이 신입생들은 내년에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의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가 인생의 기로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말 질의 하락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도 25년에 전격 시행을 공언하셨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올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이번 주 바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고민정 위원 발표하면 25년에 시행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통합모델을 운영을……

○고민정 위원 시행이 가능하지 않으시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하반기부터 통합모델 학교는 운영을 시작하고요. 또……

○고민정 위원 모델 학교에서 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통합모델 시한은 연말까지 의견 수렴해서 확정할……

○고민정 위원 장관님, 그 모델 학교도 원래는 올 초에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 공고 안 하셨지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조금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좋아요. 좀 미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하반기에 모델 학교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 25년도에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지자체하고 재정에 대한 협상도 안 끝

났고 교사들의 교원자격증에 대한 문제도 협의가 안 끝났는데 25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라기보다는 그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유보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유보통합을 어떻게 정의하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장 김영호 전격적인 시행.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통합모델은 저희가 하반기부터 선을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체계는 이번 연말에 입법을 다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기준 같은 것들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에 완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도 발언을 줄이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사상구의 김대식입니다.

첫 질의인데 비공개로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유보통합……

○고민정 위원 그러게. 질의는 공개해도 되지 않아요?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 지금 회수하고…… 어떻게 할까요?

○고민정 위원 보고 내용만 비공개로 하고 질의는 공개해도……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공개해도 뭐…… 이것 회수하는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조정훈 위원 아니요. 저희가 아마 상임위 간사님하고 상의할 때 유보통합 추진계획 27일 엠바고 자료를 드렸고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인용해서 질의를 하면 공개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이신 거지요?

○조정훈 위원 유보통합 질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오늘 비공개?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유보통합 이것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교육부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이 글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뭔가 기관 대 기관으로만 통합하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 명칭을 홍보할 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유보통합은 저출생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또 정책과 수급 관리 등이 통제되지 않아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모든 것은 기관의 입장이 아닌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즉 보육과 유아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사회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보육예산 이관이 안 될 경우에 보육사업과 초중고 교육사업 축소, 학교운영비 감축 등으로 전반적인 교육·보육의 질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관 대 기관의 통합,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으로만 가면 자칫하면 가장 핵심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해 주고 또 학부모의 그런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부분을 놓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유보통합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아동을 가장 중심에 두고 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육예산의 이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부랑 충분히 협의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그동안 보육예산으로 지출되던 것들은 최대한 전액을 다 이양받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설명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역 간의 격차 해소, 통합기관의 운영기준이 충분하게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모레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각 지역별로 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지방 단위 보육인력 이관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교육 간의 의견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보듯 뻔한데…… 그리고 직원 이관 방식 그리고 업무공간 마련,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행정과 재정 관리 이것도 체계적이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통합기관 운영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물론 세우고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 교육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또 교육청마다 조금 다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다른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유연하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지만, 특히 교육부로서는 정말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적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해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이런 협의 과정에서 진척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물론 내일모레 발표하고 나면 속전속결로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델학교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떤 방식으로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양극화가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에도 이번에 증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전남 같은 경우는 아예 의대 자체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압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는 너무 많이 증원을 해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고,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신설할지 정해 오면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도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공모 방식으로 대학을 선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향후에 교육부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서 이런 협의를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의대 설립 주체의 주무 장관이, 신설 허가 장관이 누구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신설……

○**김문수 위원** 전남도지사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왜 전남도지사 보고 의대를 선정해 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설립 장관이 누구지요, 신설 허가 장관? 도지사는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신설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도지사한테 대학을 선정해 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령보다는 워낙 이견이 많고 또 지역 내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이렇게 협의를 해 오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윤석열 정권이 일하는 것을 보면 법도 없고 체계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남도지사한테 대학을 선정해 오라고 던져 놓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도 없고 갈등만 부추기고 떠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서류 하나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의대 정원 증원 현안에도 전남의대에 관한 것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은 증원을 너무 많이 해서 제발 좀 적게 해 달라고 난리인데 전남은 아예 의대 자체가 없어서 신설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엉망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오래된 현안이고 쉽지 않은 갈등이 많이 있는 이슈라서,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좀 저희가……

○**김문수 위원** 빨리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교육부 기강 관련해서 좀……

장관님 골프 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뭐, 그냥……

○**김문수 위원** 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

○**김문수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기……

○**김문수 위원** 몇 회 하십니까? 이것 교육부 기강 관련된 거니까 하겠습니다.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현안질의 내용 주제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호** 다 들어 보시고 평가하시지요. 다 들어 보시고요.

○**김문수 위원** 좀 들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이제……

○**김문수 위원** 곤란하면 그것은……

최근에요 지난 4월 6일 날 충남 천안 인근 유명 골프장에서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았다는 의혹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그리고 민간 사업자 C씨, 전직 교육부 공무원 D씨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 교육부 공무원 두 명은 대기발령 중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골프 치다 걸린 게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대기발령 했을 것 아닙니까? 대기발령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조사가 의뢰돼 있고 아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것 말고도 또 현직 공무원이 호남 나주 지역 골프장에서 지속적으로 골프 로비를 받았고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등도 참여한 이런 사건도 제가 제보를 받게 있습니다. 골프 로비의 목적은 글로벌대학 선정 등 정부 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 접수 및 제보 내역,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처분 내역, 수사 의뢰서 등 수사의뢰 내용 그다음에 교육부 보도자료 등, 그리고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이 자 현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이 연루돼 있지요? 이 사건 조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김영호 저희가 오늘은 교육 현안이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김문수 위원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이것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현재 지금 부 내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나 교육청에 가면 퇴직자와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부, 교육청, 가는 곳마다 배너를 붙여 놔습니다. 이것 붙여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지켜야지요.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를 정해 주면, 일주일 후든 10일 후든 이렇게 정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일주일 기간 내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 일주일 내로 정확히 답변해 주셔요.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님, 이게 첫날부터 약속된 현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영호 이것은 야당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니, 다만 정리를 좀 빨리해 주세요, 김문수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끊는 것은 좀 그런데, 지금 2분 50초 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아니, 날짜를 정확히 안 잡고 지금 고려해 보겠다고 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일주일 내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됐습니다.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것은 통상 전체회의에서 문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말씀해 주시지요.

○서지영 위원 김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조사하면 될 일이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징계받으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장관의 취미생활이 어떠한지 장관의 신상이 어떠한지를 물으면서 질의를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골프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본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김문수 위원 제가 장관이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발언 중에는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슨 취지인지……

○서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정부 부처 공직자에게 질문할 때 현안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마치 현안과 직결된 것처럼 의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질의나 말씀은 좀 삼가실 수 있도록 좀 위원장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고민정…… 죄송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발언 이후에 다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다 마찬가지로인데요 상대 위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난장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뭐 하는 것이야 상관없을 테지만 상대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관례들을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간에 지금 주신 말씀을 양측에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골프라는 것이 아주 혐오스러운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했던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셨으니까 우리가 상임위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의 김준혁 위원입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하고 김문수 위원님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일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보다 적다, 이걸 다 알려진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큼니다. 전남 지역에 의대 없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OECD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7명, 우리나라는 2.1명, 한의사 포함한다고 해도 2.6명에 불과합니다.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해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의대생을 늘려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400명,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 여기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300명은 지역에 근무하는 지역 의사, 50명은 감염내과·소아외과·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분야, 50명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와 과학자 이렇게 해서 400명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서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00명 증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대란 막을 수 있게 2000명…… 내용이 2035년에는 1만 5000명 의사가 부족하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 봐도, 이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가장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해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최소 400명을 증원하자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안으로다가 제안을 했는데 2000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통계나 혹은 용역이나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고 국민들도 잘 모르고 좀 납득이 안 가고 하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장관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여러 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숫자를 내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 번 아마 정부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개 연구팀들이 거의 비슷한 수요 예측치를 내놓았고 거기에 기반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좀 생각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저희 의원실에서 교육부에다가 사전 질문서를 드린 내용입니다,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장관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생각을 하고 또 학부모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열 때문에 이상한 내용들, 지금 강남 3구에서는 의대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보고

또 혹은 지방으로 이사 가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는 것들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의대생들 늘어나고 의대 진학의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상위권 의대나 수도권 소재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의대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짜 실제 입시가에서 현역 의대·치대·한의대생들 중에 반수 응시생이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의대 중도 탈락자가 855명인데 그중 70% 이상이 지방의대생들입니다. 이렇게 의대생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방의대생들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 의대를 가기 위해서 반수하고 그러다 합격하게 되면 그 공간, 학생들은 비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대생을 늘려서 의사들을 증원하겠다는 것 하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방의대 부분을 안정화하고 반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아직까지 제안하신 적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대생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대생들이 반수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거나 하는 그 이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대 선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했고 또 정원 확대뿐만 아니고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게 의대 선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양성된 아이들이 지역의 의사로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건데요. 그 중간 이행 단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에 저희가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의대 선진화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문제들을 어떻게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입니다.

교육개혁을 함에 있어서 유보통합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유보통합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담당했던 부서들이 교육부로 이관되는데 사실 이원화 기간이 길었던 만큼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에 관리체계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지난 3월에 유보통합 2년 유예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유보통합 세부 추진 방안에 유보통합 유예나—수도권 교육감들이지요—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신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분들, 이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되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우려가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지만 얼마나 정부가 신뢰감을 주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성과를 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기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화로운 유보통합 모델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2023년 5월에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9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에서도 지역 맞춤형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현장에 떠넘기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 건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큰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톱다운으로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텀업과 톱다운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톱다운의 그런 통일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과정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 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자치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두 번째로 교원 양성체계,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양성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다른 자격체계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는 현재 자격요건이 다른 유치원 교사나 보육 교사의 자격이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특히 유치원 교사분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곧 발표될 유보통합 모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열어 놓고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완전 통합으로 갈 건지 아니면 0~2세와 3~5세를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갈등도 많고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태 위원**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연령별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교사 비율을 늘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구체적인 대책을 현장과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아직

까지 확정을 못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역인재 선발 확대 관련해서 지역인재 선발, 교육 수련, 졸업 후 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들이 정말 졸업 후 정주여건, 의사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교육부 차원에서 졸업 후 정주여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교육부의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의 큰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RISE라고 해서 아예 지역 대학들이 지역 혁신 체계의,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선도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컬대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일관되게 의대교육의 경우에도 지역 의대들이 지역의료체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 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들도 결국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하나의 흐름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역에서의 호응도 상당히 있고 또 글로컬, RISE가 이미 먼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에 같이 태워서 의대생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장들이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 의대의 증원은 특히 지역 의사들을 양성해서 또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준 위원**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인재 양성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의 근면성이라든가 그리고 교육, 정부의 능력, 이 3대 축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하고 정부 능력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상당히 국가 위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 경력을 보니까 장관님께서 이명박 정권에서도 교육부총리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 큰 방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

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영유아 차원에서는 유보통합이나 늘봄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소위 패어런트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 그래야 이제 아이들 저출생 문제도 해결을 하니까요,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업을 완전히 바꿔서, 교실혁명입니다. 세 번째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세 가지 방향으로……

○박성준 위원 세 가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3대 개혁 얘기하잖아요. 연금·노동·교육개혁 얘기하는데 교육개혁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교육개혁 전반 관련해서 이주호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의대 정원 관련된 증원에 있어서 지금 쪽 흐름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장관과 상의 안 한 것 같아요. 상의했어요? 발표할 때 모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료개혁의 주무부처는……

○박성준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방향이 대학 정원 문제 아니에요, 의대 정원? 이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주호 장관이 몰랐다고 봐요. 그러면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수장이 교육개혁하면서 입학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앞에도 다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료계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백년대계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발표하고 여기 계신 장관들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국장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 방향에 맞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의대 정원은 복지부에서 먼저 큰 규모를 결정을 하면……

○박성준 위원 제가 말씀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잘 알지요. 복지부에서 제안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 방점은 어디예요? 교육계 아닙니까? 교육계의 장관이 없었다라는 거고 서로 파트너십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거고.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게 영유아 통합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19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와요. 잘 아실 거예요, 교육에서 우리가 다 아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나오는데 이때가 뭐였냐면 전시 내각에 연합정권이었어요. 처칠과 노동당 에틀리가 나오면서 이 보고서가 나와서 1945년도에 에틀리 노동정권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복지정책이 나오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와 있느냐예요. 어느 날 보면 그냥 던지기 식이라는 말이지요.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다고 하면 예고성과 예측성, 그리고 오늘 나오면 이 정도 되면 공개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공개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 봐서?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이 정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 줄 정도면 다 공개해야지요. 이 정도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인 통합 조정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능력이에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 능력에 있는데 지금 보면 기재부하고도 조정이 안 된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가장 중요한 지자체에서의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것 지금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저는 방향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유보통합을 통해서 영아·유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요.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한 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그 부분이 좀 접근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의 실질적인 합의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산.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맵 플러스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부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심이 든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유보통합만 하더라도 역대 정권이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래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개혁만 하더라도 의대 정원 이슈도 아직까지 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 역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교육부장관 또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돼 왔었고 거처 온 정부들이 굉장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MB 정부부터 해서 그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던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25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와 법령 정비를 서두르시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일을 큰 기관과 기관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는 일을 추진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25년 1월 1일 이렇게 딱 잘라서 모든 것이 완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제도적인 완비 이후에 앞으로 진행될 그런 통합의 과정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안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이해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날 이때부터 딱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결될 수 있는 데까지의 어떤 단계적인 시행 방침, 현장에서의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로드맵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질문보다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부는 제도의 공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밀한 지자체와의 관계 그다음에 예산집행,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결국은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어떤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서비스 수준과 높은 단계의 서비스 수준에서 어디에 맞춰서 갈 것인가가 결국은 수요자가 느끼는 제도의 변화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향평준화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현장에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단계의 질적 상황에 있는 곳을 면밀하게 잘 살펴 주십사,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보통합의 성패, 저는 현장에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용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교사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도 수요자들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 문제는 향후 자격 관리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께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과 이해가 사실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유보통합의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샷에 그야말로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 발표할 로드맵, 실행계획도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도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 주신 운영 시간이라든지 또 교사 대 원아의 비중이라든지 또 무상 교육·보육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체감되는 서비스 질의 제고입니다, 보육기관이든 유치원이든 상관없이. 그게 즉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많은 재원도 소요되고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로드맵이 나와서 하나씩 진행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질 제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체제이고 교사 자격도 틀리고 교육과정도 0~2세와 3~5세도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통합시키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델하고 통합 과정을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원 체계입니다. 지금 일단 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교육부로 넘어왔고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교육청으로 또 다 이관이 돼야 됩니다. 광역부터 기초까지 일반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던 것들이 또 다 통합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지금 사실 얹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고 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거대한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특별히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나 보수·진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육부 입장에서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백승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했지만 재원 대책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까지 해마다 보육 대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유보통합 위한 재정 규모 예측하고 확보하는 데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아닌 국가재정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난 국회와 교육계·보육계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주신 유보통합 추진계획 보면 여전히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지금까지 복지부 국고는 교육부로 그리고 시군구,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전제로 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봐요. 지난해 교육부차관께서 시군구 예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신 유보통합 추진계획 3쪽을 보시면 지방재정 이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격에 따라 이관 추진한다’. 이 ‘성격에 따라’라는 것은 그러면 전부 이관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최대한 다 가져오겠다는 게 저희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항목에 따라서는 좀 가져오기 힘든……

○백승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부 이관 내용은 지자체 협의 거쳐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할 수가 없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백승아 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안부랑도 협의가 더 진행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법률 개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게 정부의 대책이 없고 교부금법 개정해서 그냥 교부금으로 다 하겠다는 뜻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최대한 일반 지자체에서 하던 것도 다 갖고 오고 또 복지부가 하던 것도 다 갖고 오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부의 원칙이지만……

○백승아 위원 그 과정이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상대가 있는 만큼 계속 협의 중입니다.

○백승아 위원 교육부가 이 재원 대책 마련하겠다 하고 그냥 대책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지자체 예산 중에 국고 대응투자가 3.1조고 자체 예산 1.9조, 합치면 5조 원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돈입니다. 이런 큰 액수를 어떻게 이관할지 올해까지 아무것도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로 지금 제가 들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책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백승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공개가. 그렇지요?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조금 확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백승아 위원 힘든 것을 그렇게 막 덮어놓고 추진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지자체가 국고 대응투자 예산 교육청에 그냥 내어 줄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조건 없이 예산 준다고 해도 지자체들마다 그 지원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일정 수준 맞추려면 돈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부는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영유아 교육지원예산 사업내역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파악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백승아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셨거든요. 파악하셨으면 내역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자체들 지원사업 현황 살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만큼은 내가 유보통합을 해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국가가 책임져야겠다 이런 항목이 있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항목들은 다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제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 못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가책임 유보통합이 아니라 약간 국가 무책임 유보통합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지금 교부금으로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부금 문제도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지자체 예산, 통합 모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이것 다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교부금이 얼마가 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국고에서도 가져오고 또 일반 지자체에서도 다 가져와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맞춰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교부금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백승아 위원 지난해 세수 감소로 10조 4000억 원 교부금이 지금 미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75조 7000억 가운데 10조 4000억이나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기재부 자료를 보면 올해 또한 더 감액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에서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고정경비가 75%거든요. 교부금이 70조라고 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은 17.5조 원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금 늘봄학교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지요, 디지털 교육하라고 하셨지요, 기초학력 문제 해결 이런 것, 돈 들

데가 너무나 빠듯한데 유보통합에만 드는 돈이 한 4조에서 6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모델 적용도 추가 재정 소요가 될 것이잖아요. 작년 초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 어린이집 시설 개선,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연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다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것만 2.6조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추계한 추가 소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지금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추계 안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기존의 보육 예산 전액 이관해 오는 것도 지금 불투명하다. 둘째, 추가 소요 예산 대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부금뿐이고요. 셋째, 추가 소요 예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사항인데요. 맞습니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재정 이슈는 지금 워낙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백승아 위원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물론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 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정부 재정 책임 내팽개치고 유치원, 교육계·보육계 모두의 우려를 전혀 지금 불식시키지 못하고 공개하는 것도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가 재정 책임을 상당 부분 담당하면서 통합 모델 근거로 격차 해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장관님께서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을 항상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덮어놓고 통합하면 세계 꼴찌 유보통합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재정 투자 필요하다는 점 재정 당국과 협의하셔서 대통령께도 꼭 건의하셔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재정에 대한 자세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자료도 있지만 사실 재정 당국에서 좀 이런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또 같은 방향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은 재정을 확보해서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성국 위원 유보통합은 제가 교총 회장 할 때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유보통합이라는 단어 말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단어로, 용어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용어라서, 저희도 조금 그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만 좀……

○정성국 위원 장관님, 제가 기자들하고도 이야기 나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이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의 자율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자들도 교육 전문 기자가 아닌 경우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유보통합이 뭐지?’ 하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부연 설명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국민들께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대대적으로 유보통합이다 하고 이게 지금 거의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교육개혁의 성과로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봄학교보다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앞으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목적은 책임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책임교육 구현입니다.

○정성국 위원 질 높은 책임교육을 하겠다.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맡기는 것을 떠나서 이제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해서 아이를 마음껏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리겠다는 것도 크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이 저출생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제 좀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인식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은 지금 이제 발표를 앞두고 유보통합이 잘되면 영아 때부터, 0세부터 5세까지의 교육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뀐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특히 우리 아이들, 결혼하려는 세대들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다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성과, 큰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어떻게든지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내셔야 되겠다. 이게 치적을 홍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라는 단어를 고칠 수는 없지만 국민들께서 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획들을 보니까 나름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0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이 아이를 담당하다 2명으로 줄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지금 이제 가장 제가 이것 하나는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에서 영유아정교사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를 구분하는 안, 이것 지금 어디까지 시행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계속 좀 더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느 쪽의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보고 계시는지. 조금 어렵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그게 부총리님 어려운 만큼 제가 보기에 영유아정교사 단일 자격, 즉 0~5세를 단일 자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영아정교사 0~2세, 유아정교사 3~5세로 구분하느냐 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생을 가르치던, 5세 정도를 가르치던 분이 0세, 1세를 맡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숫자로 보면 0~5세 하면 그 안에서 다 똑같이 생각, 이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차이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내려가 보면 0세와 3세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차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이 자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교육부총리님하고 실무에서, 이 자격을 잘못 정해 놓으면요 현장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클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세세하게 다듬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크게 보면 기존의 교사분들은 분리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미래를 보면 0~2세 부분과 3~5세가 사실 통합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케어와 교육을 담당하도록 훈련을 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욕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절충하는 방안들이 지금 나와 줘야 되는데요 계속 국회와도 상의드리고, 워낙 큰 문제라서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을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관계자가 국회랑 소통을 많이 하시고 현장과도 소통하셔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졸속 추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요 의료 교육까지 지금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교육으로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보고해 주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서 25년도까지 늘어나는 신입생에 따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1000명을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사실 의대 교수님들 정원을 1000명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동안은 정말 한 자리 숫자도 늘리기 힘들었지만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1000명을 늘리겠다는 결정을 행안부와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가 다 같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을호 위원 결정은 행정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지방의대 교수가 엄청 구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경남지역 국립의대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고만 5년째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필수의료 분야.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한 분도 지금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필수의료 분야의 체제, 수가도 체제도 바꾸고 또 의료사고 위험에 대응하는 체제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개혁이 된다면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우리 교육부차관님은 아니신데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임교수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금교수에서 확보하고 임상교수들이 기금교수가 되는 방식으로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교수님들을 양질의 교수진을 확보하여 계속 채울 수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00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가장 그래도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아니, 노력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노력할 교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학교 현장 분위기를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잘 현장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필수의료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데 외과나 내과, 방사선과 같은 필수의료 교수 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거의 지금 교수와 개업의 간 급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안 온다는 현장의 말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부분은 보수의 갭을 메워 주는 그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두면 교수 충원이 힘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개혁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유인을 더 높이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고요.

○정을호 위원 전임의라든가 그분들이 다시 교수로 들어오는 그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다양한, 좀 더 폭을 넓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금 충원하던 단선적인 그런 충원 체계보다도 좀 다양한 충원 경로를……

○정을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폭이 어떤, 그러니까 본과대 박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것은 현장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을호 위원 기초의학 교수님도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다른 과 박사님을 지금 교육을 하신다 하시는데 그런 분을 모시고 오겠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당연히 질적으로 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동안 너무 벽을 높게 쌓아 놓고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낮추면서, 그렇지만 충분히 질적인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 또한 양질의 교수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는 우려점이 많습니다, 말뿐이 아닐까 하는. 그 다음에 교육의 질 저하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9월 달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좀 구체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말씀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9월 달에 의대 선진화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의 질의 순서인데요. 우리 회의 전에 조정훈 간사님 또 문정복 간사님이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두 분이 결단을 내셨습니다. 두 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리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제 질의 끝나고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유보통합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늦어졌다, 이 정책이……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보니까요 작년에 2023년 1월 30일 날 보고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딱 1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25년 5세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데다가 법을 보시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작년 1월 30일 방안에는 2023년 9월경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또 보고에는 24년 말에 일괄로 개정하겠다고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일단 지적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나 정부의 이런 어떤 시책들이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일들이겠지요, 미리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가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아까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도 현장하고 조율 중이라고 그러서 가지고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현장 의견 수렴과 관련된 것인데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20명이 넘는 위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좀 세세한 논의는 쉽지 않고요 위원님들 그룹별로 해서 저희들이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유보통합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이 사실 굉장히 첨예한 부분일 텐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또 취합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 당초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추진을 위한 현장의 대표분들 모시고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요. 논의 안건은 영유아 교육, 그러니까 유보통합추진단이 수립을 하고 또 교원 자격과 양성 체제,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이런 주요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경숙 의원실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4월 4일 출범한 이후에 몇 번의 이 위원회 회의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반기별로 한 번이기 때문에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과연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주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을 이루는 데 어떤 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숙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스무 분이 넘는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회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소규모 모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논도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개별적인 소통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당초에 발족할 때부터 갈등과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교사가 아닌 기관운영자들이 추천한 위원들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요 불균형성과 비합리성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구성하는 인원 그 부분에서부터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반기에 한 번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안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주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분야는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교육계에 있었지만 사실 보육계하고 교육계가 함께 이렇게 통합이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금 아주아주 중차대한 국가의 큰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 수렴이라든지 숙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2021년 공약으로 처음 제시했고요 햇수로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시한이, 불안감이 되게 커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유아특수교육과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비공개를 하자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국가의 행정부의 공신력을 조금 더 담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차근차근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좀 더 적극적인 소통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영유아 부분의 특수교육 문제는 계속 상의드리고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유보통합 문제나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잘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일 가질 기자회견 내용을 죽 보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은 없으셨던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공통된 의견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 마련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오늘 없으셨어요.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이 마련이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관련 보육교사들 또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부 측은 빠른 시간 내에 재원에 대한 확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국회에도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늘 박성준 위원님과 고민정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청가 위원(1인)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전문위원 정순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차관보 나주범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

대변인 구연희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지역인재정책관전담직무대리 윤소영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정영훈

기획지원관 박대림